

민주, “이진숙, 공영방송 이사 선임하는 즉시 탄핵”

오늘 본회의에 탄핵소추안 보고
‘법카 유용 의혹’도 고발키로
李 취임식서 “이사회 구성 빨리”
이사 선임 비공개 전체회의 실시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안을 의결하는 즉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국회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이날 “이 위원장이 만약 심의 의결해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하고 추천하거나 방통위 차원에서 방문진 이사를 임명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방통위원장에 대해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방통위는 대통령과 대통령이 추천하는 상임위원, 여당 추천 몫 1명, 야당 추천 몫 2명이 완성돼야 합의제 기구로서 위원회가 성립된다”며 “그 뜻이 정당하려면 오늘 회의를 소집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한민수 대변인도 “(이 위원장이) 신속하게 공영방송 이사 임명 관련 문제를 처리하려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예상처럼 한다면 내일(8월1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방통위가 2인 체제로 가동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31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 의례를 하고 있다.

면, 즉시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이 위원장이 이날 공영방송 이사 선임

안을 의결할 경우, 곧바로 탄핵 절차에 돌입해 1일 본회의에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2일 또는 3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또 이 위원장을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위원장을 ‘법인카드 사적유용 의혹’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위원장은 대전MBC 사장 재직 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은 물론, 재임기간 중 청탁금지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을 초과하는 접대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 위원장은 말로만 문제없음을 주장했을 뿐 증빙자료는 일체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김태규 상임위원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 재가를 받고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된 취임식에서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공영방송이 공정한 보도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공영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사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과 김 상임위원 2인 체제가 된 방통위는 이날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와 한국방송(KBS)의 새 이사진 선임안을 의결하기 위한 오후 5시 현재 비공개 전체회의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김선욱 기자

조국 “중부세 줄이거나 없애면 지역 망해”

조국(사진) 조국혁신당 대표는 31일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쓰이는 종합부동산세를 줄이거나 없애면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타격이 갈수 있다며 중부세 완화론 등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등은 중부세 때문에 중산층의 허리가 휘다고 하지만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중부세 납부자는 지난 2022년 119만5000명이었다가 지난해는 40만 8000명에 그쳤다. 이는 전체 국민 상위 0.8%, 주택 보유자 중 2.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각에서) 1주택만 가진 시민에게 지나친 고통을 준다고 하는데 지난해 중부세 납부 대상 1가구 주택자는 17만명이고, 공시가격은 평균 17억1000만원, 시가로 24~28억원 정도”라며 “시가 20억



원이 넘는 집에서 살면서 1년에 80만원도 못 내겠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중부세의 70%를 수도권에서 걷지만

75%는 지역으로 내려간다”며 “이런 지경에도 중부세를 줄이거나 없애면 지역은 완전히 망한다. 그렇지 않아도 윤 정부는 조부자 감세 정책으로 세수가 부족하는데 더 줄여주겠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중부세 폐지를 이유로 1주택자를 드는 것은 빈대를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라며 “이런 장단에 맞춰주면 조부자 감세 서민 쥐어짜기에 동조하는 셈이 된다. 빈익빈부익부 가렴주구식 세금정책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권익위, 농축수산물 ‘상시 30만원’ 검토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 가격 조정 관련 전국 각지의 현장 의견을 들으며 적정 수준을 모색한다. 권익위는 농축수산물 선물 가격 ‘상시 30만원’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

권익위는 지난 29일 인천 소래포구전통어시장 방문에 이어 31일 서울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을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8월에도 1일 대구 축산물가, 2일 부산 자갈치시장, 6일 광주 농수산물도매시장, 7일 홍천 인삼유통센터 방문이 이어진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22일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음식물 제공 가격 기준을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 가격을 현행 15만원(명절 시기 30만원)에서 ‘상

시 3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 전망 등을 고려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고 의결하지 않았다.

청탁금지법 법문에 ‘설날·추석 기간에는 선물 가격 범위를 평상시의 두 배로 상향한다’는 조항이 있어, 시행령상 농축수산물 가격 기준을 30만원으로 고치면 명절 기간에는 자동으로 60만원이 적용된다.

60만원은 너무 큰 금액이기 때문에, 먼저 해당 법률 조항을 고친 뒤 시행령을 개정해 ‘상시 30만원’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이 권익위 입장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 등에서 많은 아쉬움을 표현했으며 정치권에서도 농축수산물 선물 가격을 최대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부분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했다.

뉴스

광주지역 의대 졸업생 38% , ‘수도권 의사’

2022년 비수도권 43% 수도권 취업 광주는 2020년부터 매년 증가 추세

지난 2022년 광주 지역 의대 졸업생의 38% 가량이 수도권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지역 의대 졸업생의 수도권 취업이 늘고 있다.

이대로라면 지역 의과 대학의 정원을 늘려도 의료진의 수도권 쏠림 현상은 해소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의학계열 학과 졸업생 중 상세 취업정보가 확인된 2633명의 60.7%(1599명)가 수도권에 취업했다.

특히비수도권 의대졸업생(1710명)의 43.2%(738명)가 수도권에 취업했고, 이중 울산 대학 졸업생은 79.5%, 강원 대학 졸업생은 70.5%가 수도권에 취업했다.

충남 61.5%, 전북 45.8%, 광주 37.9%, 경북 35.8%, 경남 35.7%, 대전 35.6%, 충북 32.6%, 부산 29.0%, 대구 28.7% 순으로 비수도권 의대 졸업생이 수도권에 자리를 잡았다.

광주지역 의대 졸업생은 2020년 17.2%에서 2021년 26.6%, 2022년 37.9%로 매년 수도권 취업자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5년 간(2018~2022년) 의대 졸업생의 수도권 병원 취업률은 2018년 55%에서 2022년 60.7%로 증가했다.

의대 졸업생 가운데 자신이 졸업한 의

대가 속한 지역에 취업한 현황을 보면, 지난 5년 동안 경북은 17명(3.3%), 울산 16명(8.6%)에 불과했다. 경남, 강원, 충남지역도 각각 77명(19.6%), 214명(21.1%), 194명(31.5%)으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광주는 386명(50.6%)으로 비수도권에선 대구, 충북 다음으로 높았다.

백 의원은 “의료인력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는데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의료인력을 배치·관리하고 운영할 것인지 대책 없이 의대 증원만 밀어붙이고 있다”며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그리고 지역의대 출신 의사들의 지역 정주여건 마련 등 지역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 검토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윤, 노동장관 후보자에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김문수(사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지명했다.

또 방송통신위원장 상임위원에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임명했다.

주일본 대사에 박철희 국립외교원장, 주호주 대사에 심승섭 전 해군참모총장, 국립외교원장에 최형찬 주네덜란드 대사가 임명됐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 대통령 인선을 발표했다.

정 실장은 “김 후보자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20, 30대를 노동현장에서 근로자의 권익향상 위해 치열하게 활동했다”며 “그 경험을 바탕으로 15, 16, 17대 국회의원으로 노동환경 분야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했다”고 말했다

다. 그는 “경기지사를 두차례 역임해 GTX 신설 발표 등 공약이행 평가에서 1위를 했고, 최근에는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를 위한 노사정간 사회적대화와 협의를 이끌며 경제 활성화에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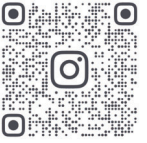
그는 “우리사회에 고용노동 현안이 산적한 시점에 노동현장과 입법부, 행정부를 두루 경험한 후보자야말로 다양한 구성원간에 대화와 타협 바탕으로 노동개혁 과제 완수 책임자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jinilbo
진일보 인스타그램

진일보는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뉴스서비스입니다.
한발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



Kakao Talk : 진일보
E-Mail : jebo@jinilbo.com